학생 불편 뒷전…대학들 '주차 장사' 너무하네

수용 가능한 차량의 2배 넘는 주차권 판매
학생들 매연·소음 시달리고 보행권 침해
불법 주차·사고 위험에도 대책 마련 소극적

전남대와 조선대가 학교 주차 공간의 2배가 넘는 주차권을 팔아 학생 안전보다는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족한 주차 공간·불법 주차 단속 등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학생 안전을 도외시한 채 주차 수익 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3월 현재 학교 내 주차 공간은 2623면인 반면, 일정 금액의 주차비를 받고 주차를 허용하는 장기 주차(월·연간) 등록 대수는 4154대에 달한다. 장기 주차권 발급을 교원·직원·대학원생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도, 주차 공간에 비해 1.5배 많은 차량이 드나들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정기적인 주차권 없이 학교를 드나드는 차량도 적지 않아 매일 학교 안 도로 주변은 불법 주차 차량으로 넘쳐나는 실정이다.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를 지나가는 학생들의 불편과 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형편이다.

주차면수와 주차권 판매 현황

■ 전남대

주차 면수	2623면
주차권 판매	4154대

■ 조선대

주차 면수	3959면
주차권 판매	9900대

조선대는 더 심하다. 조선대가 확보하고 있는 주차 공간은 3959면에 불과하다. 조선대는 그러나 공간에 비해 2.5배가 넘는 9900대에 대해 장기 주차권을 판매했다. 대학원생과 학부생 중 시외거주자 등으로 주차권 발급을 제한하고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게 학교 입장이다.

여기에 단순 업무를 위해 학교를 찾는 일반 차량· 대학 내 산업체 방문 등을 목적으로 한 차량, 학생 차량까지 합세하면서 학교 주변은 매일 주차 '전쟁'이 벌어지는 실정이다. 결국, 충분한 주차 공간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돈을 받고 장기 주차권만 발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학교측은 그러나 부족한 주차 공간에 비해 훨씬 많은 차량의 주차를 허용하면서 빚어질 수 있는 사고 위험에도, 추가 주차 공간 확보 및 불법 주차 단속 등 대책을 마련하는데는 미온적이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 달 평균 1억원에 이르는 주차 수익을 활용해 부족한 주차 문제 및 학생 안전을 위한 대책에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전남대 관계자는 "학교 내 보조운동장 터(2만3000㎡)에 1300대 주차가 가능한 지하 2층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가 400억대 비용 문제로 무산됐다"면서 "지난 2012년부터 주차장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3~4억의 예산을 적립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집 욕실에서 둔기에 맞아 남편 피살
아내는 주방서 일하느라 못들었다?

남편 살해 혐의 60대女
"강요에 자백" 진술 번복
진위 가리려 현장 검증

24일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A아파트에 광주지법 판사들이 모였다. 지난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A(66)씨의 '무죄'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증을 위해서다.

이날 검증은 피고인 A(여·66)씨가 법정에서 검·경 조사와 달리, 진술을 번복하며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뤄졌다.

현장엔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와 검찰, 변호인측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A씨의 집 욕실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를 경우 A씨가 일하고 있었던 주방까지 소리가 들리는 지가 핵심 검증 여부였다.

사건 당시, A씨의 남편 B(70)씨는 둔기로 머리 등을 수차례 맞아 숨져 있었는데, A씨는 경찰·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법정에서 "당시 나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 주방일을 끝낸 뒤 욕실에 가보니, 남편이 살해당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무죄를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녀의 진술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증에 나섰다.

A씨는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련, "경찰 조사과정에서 남편 장례식장에 빨리 가고 싶으면 범행을 자백하라고 했다. 강요에 의한 자백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경은 B씨 살해 도구로 쓰인 둔기에서 A씨의 DNA가 발견된 점과 CCTV 화면분석에서 외부 출입 흔적이 없는 점 등 직·간접적인 증거를 대며 A씨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7시께 광주시 북구 A아파트 자신의 집 욕실에서 남편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속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주말 틈타 불법 조업 中어선 무더기 나포

주말을 이용해 우리 해역에 침입해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 어선이 무더기로 해경에 나포됐다.

24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93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선적 80t급 단타망어선 N호 등 2척을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조업허가증 없이 우리 해역에 침입해 아귀 등 잡어 2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선박은 선단을 짜 작업을 벌였으며, 나머지 1척은 어구를 빌려주고 불법조업을 도운 혐의로 적발됐다.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께는 가거도 서쪽 78km 해상에서 중국선적 270t급 선박 등 2척이 제한조건 위반으로 적발됐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선박은 어업허가증이 없이 작업을 벌이고, 조업일지나 승선원 명부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이주여성 무료 치과 검진·치료 조선대치과병원이 제6회 잇몸의 날을 맞아 24일 오후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31명에게 치주병 검진과 치료 등 무료 진료봉사를 실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정원·검찰 규탄 집회 민변·참여자치 21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조작과 관련해 광주·전남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시민단체 참여자치 21은 24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주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한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조작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가 정보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증거를 위조하고,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처벌하려한데 검찰 특별수사팀은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 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 취하,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분리·이관과 수사기관의 증거위조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청소년 4명 중 1명 스마트폰 중독

25.5%…중학생 29.3%나
맞벌이 가정 자녀들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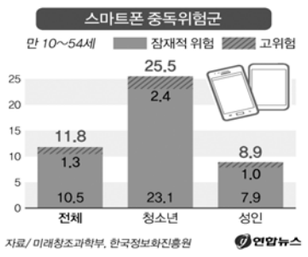
우리나라 청소년 약 4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해 금단·내성 현상을 보이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는 상태를 말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만 10세 이상 54세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 1만55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2013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에 속한 만 10~19세 청소년의 비율은 25.5%로 전년 18.4%보다 7.1%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조사 대상자 가운데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은 11.8%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상승했고, 성인(만 20~54세)은 8.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줄었다.

청소년의 절반가량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53.2%),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됐다"(48.0%), "스마트폰을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한다"(47.2%) 등 스마트폰 중독과 연관된 현상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2013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중학생은 전체의 29.3%가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에 속하면서 각 학령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 맞벌이 가정 청소년(26.8%)이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중독위험군 비율은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가구가 22.2%이고, 200만~400만원 가구는 25.3%, 400만~600만원 가구는 26.8%, 600만원 이상 가구는 22.3%로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일수록 중독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아이디 도용·여성행세하며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행각

쌍나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이며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사용하고, 여성행세까지 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서행.

○…24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류모(18)군은 지난 1월부터 이 달까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와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모두 90여명에게 100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

○…류군은 인터넷 거래가 얼굴을 보지 않고 이뤄진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들의 정보 공유로 더 이상 범행이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하고 계좌를 변경하는가 하면, 여성인 것처럼 문자 내용의 어투를 바꾸기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

/순천=김은종기자 ejkim@